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6/ 28 통권 1629호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20억달러에 회사를 판 까닭은?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Tip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조특법 제16조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절세혜택

### CFO · 회계실무자 · 조세전문가 정보

- 종업원에게 대여한 학자금이나 일시적 가불금은 인  
정이자 계산하지 아니함
- '23년 하반기 발전연료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  
율 운용방안
-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이 시정됩니다
-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Tip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시행령안 입법예고
- 퇴직연금, 운용은 보다 유연해지고, 공정경쟁 안착을  
위한 시장 규율은 강화된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MO · 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본점에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의 의사결정이 이루  
어진 후, 지점에서 관련 후속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도 본점에서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가능함 (p.15)

CEO · CFO · 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경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戰略

###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해외국제기구에서 받는 용역대금의 과세방법〉

활동특징	종속근무계약	자유활동계약
소득유형	근로소득 (근로계약)	사업소득 (인적용역계약)
부가세 등	신고의무 없음	영세율 부가세 신고
납세조합	가입가능(세액 5%차감)	좌동
차감비용	근로소득공제	실제 소요 적격비용
유불리	적격비용 없으면 적용 가능	적격비용 많으면 유리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5년간 근로소득의 19% 단일세율	해당안됨
외국인 기술자 감면적용	내국인에게서 받는 근로소득세 액의 50% 감면(5년)	적용안됨
비거주자	국내활동소득만 과세	사업자등록가능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 · 경리 · 세무 · 재무 · 인사 · 노무 · 총무 · 법무 · 기획 · 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 · 교육 · 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29호 / 주간 26호

2023. 06. 28. (수)

· 발 행 인 : 이 윤 연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예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해외국제기구에서 받는 용역대금의 과세방법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조특법 제16조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절세혜택	2
C E O 에 세 이	20억달러에 회사를 판 까닭은?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업무용 승용차 법인리스차량 계약 종료후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 누계액 손금산입 시기 및 방법 문의 - 수출거래 구분 및 회계처리, 부가세신고 방법 문의 - 수익사업 내에서의 비용처리 구분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중임원에게 대여한 학자금이나 일시적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하지 아니함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 -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9 10
직 장 인 Survival	자기계발의 기초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A법인)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 할합병의 상대방 법인(B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 급하는 B법인 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 항제5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안-1000, 2022.05.20) -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 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 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로서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 하는 경우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03분의 3)가 가능한 것 임 (사전법규부가-1020, 2022.12.08)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국세청, 2기 중소기업 기업승계 컨설팅...7월 한 달 동안 신청접수	14
마케팅 Tax consulting	본점에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지점에서 관 련 후속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본점에서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가능함	12
세 무 정 보	- '23년 하반기 발전연료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이 시정됩니다 -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Tip	15 17 23
회 계 정 보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29
노 무 정 보	-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시행령안 입법예고	33
경 영 정 보	- 퇴직연금, 운용은 보다 유연해지고, 공정경쟁 정착을 위한 시장 규율은 강 화된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6 40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 정환율	4

# 조특법 제16조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절세혜택 (유권해석 필요)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컨설팅  
(Deal business)  
(829-7575)

- ㉠ 적용기한 연장 : 22년말에 2025년 말까지의 출자·투자금액에도 종합소득공제 적용
- ㉡ 소득공제금액(간접투자) : 벤처·신기술사업조합 등, 벤처투자신탁증권 투자액의 10%
- ㉢ 소득공제금액(직접투자)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방식투자는 : 당년도 투자액 3천만원까지 100%, 3천~5천만원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액은 30%
- ㉣ 소득공제연한도액 :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최대한도)  
(특정연도 소득이 적으면 향후 2년, 즉 당년과 3년 중에서 소득 많은 1년 선택 신청가능)
- ㉤ 쟁점 1 : 특정연도에 여러개 벤처기업에 분산투자한 경우도 각 투자액을 합산하여 ㉣ 100%, 70%, 30% 공제 적용 ≤ 연한도 ㉣
- ㉥ 쟁점 2 : 특정 벤처기업에만 올해 출자, 내년에 증자, 3년째 추가 증자투자한 경우도 매년 ㉣ 100%, 70%, 30% 소득공제 적용 ≤ 연한도 ㉣
- ㉦ 쟁점 3 : ㉣의 조합등 간접투자소득공제는 매년 적용가능
- ㉧ 결론 : 특정연도에 여러 회사 분산투자과 여러연도에 걸쳐 한 회사에만 출자+증자, 2차증자 투자 등도 모두 ㉣와 ㉣를 적용하여, ㉣한도내에서 종합소득공제 가능하다고 해석됨(국세청 유권해석 확인 필요)

# 20억달러에 회사를 판 까닭은?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스티브 김, 한국이름으로 김윤중 CEO는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나온 후 1976년 맨손으로 미국행을 단행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정보통신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일랜(Xylan)을 창업, 3년 만에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창업 5년 만에 연매출 3억5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1999년 프랑스 알카텔사에 회사를 20억 달러에 매각함으로써 아시안계 최고의 억만장자가 됐다. 2007년 1월, 30여년의 미국생활을 청산하고 아내와 세 자녀를 동반해서 영구 귀한 했다.

이어 '꿈·희망·미래 재단'을 설립, 장학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연간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많은 한국장학생과 연변지역 조선족 장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북한 나진·선봉지역에 버스과 빵기계, 비료공장, 선박 수리소 등을 지원하고, 제3세계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등에 교사와 도서관을 지원했다. 그는 말했다. "젊어서는 버는 돈이 내 돈이고 나이 들어서에는 쓰는 돈이 내 돈!"이라고.

지금까지의 신화 자체만으로도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뜨겁게 했으나 70이 넘는 나이에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도전정신 또한 대단하다. 그야말로 맨손으로 이론 아메리칸 드림인 동시에 아시아의 빌 게이츠, '창조적 자본주의'의 실천가라 할 만하다.

한국은 남과 북이 대치, '투 코리아(2 Korea)'로 맞서왔다. 가만히 살펴보면 쌍방 기형적인 성장이 내재해 있다. 북측은 말하자면 '쓰리 디 코리아(3D Korea)'다. 위험하고(dangerous), 힘들고(difficult) 어둡다(dark).

핵을 무기로 국제사회에서 위험한 줄타기 곡예를 한다. 그리고 철통같은 세습 왕조를 구축하고 임기가 있는 자유세계국가 리더십의 약점을 유린한다. 힘든 상대다. 물론 폐쇄사회다. 어둡다. 남측도 '쓰리 디 코리아(3D Korea)'다. 역동적이며(dynamic) 꿈(dream)이 있고 역시 어둡다(dark).

수십 년간의 발전 동력은 가난을 이겨보겠다는 일념이었다. 가난 극복, 그것은 꿈이었다. 그만큼 역동적이었지만 숨 가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자살율은 세계1위를 돌파했다. 또 어둡다. 대규모 분식회계, 비리, 고물가 등이 매년 국민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지도층의 뽐뽐함도 여전하다.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세련됐을 뿐이지 암흑은 여전하다고 믿는다. 전투기나 무기구입에 따른 국방예산을 등쳐먹고 재벌들의 편법 증여·상속이 늘 끊고 있다. 그래서 사회통합은 항상 공염불이다.

예전에 한 공기업의 어처구니없는 졸속 기업인수가 있었다. 그 공기업은 국가의 석유자원 확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이다. 그 기관은 캐나다의 석유기업을 해외기업 M&A 역사상 최대인 4조7000억 원을 들여 인수했다.

"2조원의 부채까지 모두 인수하면서 거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49%를 얹어서 준다?" 젊은 기자들은 이상했다. 여러모로 살폈다. 2007년에 이어 이듬해 상반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래서 현지 애널리스트들은 "두둑한 프리미엄을 줬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거래"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제대로 된 수익 한 번 내지 못한 채 부실자산으로 혈값에 내놓았다.

자원외교를 최고업적으로 남기고자하는 정권이지만 해당 공기업과 관료들은 공명·정대·투명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은 '쓰리 에스 코리아(3S Korea)'로 나갈 수 있다. '햇별이 내리쬐는 밝은 한국(Sunny Korea), 강력한 한국(Strong Korea), 현명한 한국(Smart Korea)' 말이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16일 (금)	6월 19일 (월)	6월 20일 (화)	6월 21일 (수)	6월 22일 (목)
미	달 러 (USD)	1280.10	1273.50	1280.70	1282.20	1291.50
일	본 엔 (JPY)	913.48	897.49	902.31	907.46	911.50
영	국 파 운 드 (GBP)	1637.25	1634.03	1639.36	1636.60	1649.50
캐	나 다 달 러 (CAD)	968.60	965.50	969.53	969.31	981.46
홍	콩 달 러 (HKD)	163.66	162.84	163.85	163.85	164.98
중	국 원 (CNH)	178.67	178.66	179.46	178.29	179.54
유	로 화 (EUR)	1401.84	1393.53	1398.84	1400.35	1419.68
호	주 달 러 (AUD)	881.28	876.42	877.60	870.36	878.35
싱	가 폴 달 러 (SGD)	958.05	952.26	955.28	954.62	963.84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6.72	275.98	276.76	276.34	278.04

### 업무용 승용차 법인리스차량 계약 종료후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 누계액 손금산입 시기 및 방법 문의

**Q** 2022.11.30일자로 업무용승용차 리스계약 해지후 리스차량 반납  
2022.11.30현재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누계액: 18,000,000원  
이 경우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다음 3가지 방법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요.

- 1) 리스계약기한이 만료된 당해년도부터 800만원씩 손금산입.
- 2) 리스계약기간이 만료된 당해년도에 손금산입하되, 당해년도 손금산입액은 월할계산
- 3) 리스계약기한 만료된 해의 다음년도 결산시부터 800만원씩 손금산입.

**A** 사업연도중에 임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해는 임차기간으로 안분하여 감가상각반영하므로 2)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수출거래 구분 및 회계처리, 부가세신고 방법 문의

**Q** 수출거래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중국에서 매입한 자재를 한국에 가져오지 않고 베트남으로 바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매입 USD가격 = 매출 USD가격)  
계약은 "중국과 한국", "한국과 베트남" 끼리 계약 되었으며, 중국-베트남 상호간에는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중계무역인지? 아니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 제품인도 : 중국 -> 베트남  
- 대금흐름 : 베트남 -> 한국 -> 중국
2. 수출인식시점 및 환율적용일은 선적일인지? 외국(베트남)에서 인도되는 날인지?  
외국에서 인도날일 경우, 배에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중국에서의 선적일(BL상 선적일)을 인도날로 볼 수 있는지?
3. 부가세신고시 제출 필요한 증빙서류는?
4. 8~9월 거래인데 예정신고시 누락 되었습니다. 12월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포함하여 신고 가능한지?
5. 12월 확정마감 예정신고누락분에 포함하여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 및 수출실적명세서에도 똑같이 포함해야 하는지?
6. 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외에 다른 추가 가산세가 있는지?

A

1. 귀사의 경우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베트남에 인도하는 시점(귀사와 베트남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인도시점이 결정됨)인데, 선적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선적일이 인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3.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입증서류가 됩니다.
4. 예정신고시 영세율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귀사의 의견대로 영세율과세표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수익사업 내에서의 비용처리 구분

Q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 재직중인 회계직원입니다.  
회계기준에 따라(법인세법 113조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나누어 장부를 작성중이고, 수익사업의 대부분은 면세(도서공급)사업 이였습니다. (사업①)  
올해 초 과세사업 업종(숙박및 카페음식점업)을 개시함으로써(사업②),  
회사코드를 추가 생성하여 수익사업을 두가지로 분류하여 기장하였습니다. (더존프로그램 사용)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실지 귀속에 따라 새로운 사업(사업②) 관련 비용만을 공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②) 비용의 일부를 (사업①)에서 처리하게 된다면  
수익비용 대응의 대원칙이 깨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처리한 비용을 수익사업 내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기존대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문제 없을지, 아니면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을 해야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2의 비용을 사업1에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되며, 사업2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1과 사업2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만 안분하시면 됩니다.

# 종업원에게 대여한 학자금이나 일시적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하지 아니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대여금은 대여 상대방에 따라 일반대여금과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또는 관계회사 대여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회계상으로는 자금대여의 상대방이 누구냐를 불문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자율이 아닌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상이나 저리의 약정이자율로 거래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고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고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라도 일시적 급여 가불이나 학자금 대여액 등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종업원에게 학자금 대여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상당액과 법인이 계상한 이자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아 세법이 정하는 인정이자율이나 인정이자율과의 차이 상당액을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반영한다. 이때 인정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산입은 물론 금전을 대여받은 직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받은 직원의 상여로 처분함으로써 직원의 개인 근로소득으로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자금대여시 인정이자계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국민연금법에 의해 직원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직원의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여의 가불금,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 등을 대신 부담한 금액 등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법인세법 규칙 §44).

또한 사용인(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세법규정상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은 배제하면서 인정이자 계산은 적용해 왔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44(7))이 개정되면서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대여하는 학자금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인정이자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그외의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장기저리나 무이자 자금대여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인정이자금액은  $\text{가지급금} \times \text{적수} \times (\text{인정이자율} - \text{실질대여금리}) / 365$  (윤년 366)로 계산하는데, 인정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적용한다.

법인에 차입한 금액 등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2023년 귀속분에 대한 당좌대출이자율은 4.6%이다.

## 무주택종업원의 주택구입 대여금은 인정이자율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때는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현재는 종업원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이다.

다만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로 차입했더라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과 대여 금리와의 차액만을 인정이자로 계산한다. 즉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차입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법인세법 §89③).

### ◇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전의 대여 ◇

- ① 미지급소득(배당소득,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규칙§44, 1호)
- ②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급료·기타비용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44, 2호)
-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44, 3호)
- ④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규칙§44, 4호)
- ⑤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규칙§44, 5호)
- ⑥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안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규칙§44, 6호)
- ⑦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포함)의 대여액(규칙§44, 7호)
- ⑧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규칙§44, 8호)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

최고세율 50%	OECD 2위
최대주주 할증과세 20%	전세계 유일
30억원 이상 최고세율 적용	주요국 대비 낮음
유산세 방식	개인의 과세부담 증대
자동 증세 효과	기대수명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증세효과



### OECD 회원국의 상속 관련 과세체계

구분		국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국가	유산취득세 방식	20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산세 방식	4개국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자본이득세 부과		4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추가 소득세		3개국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비과세		7개국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노르웨이, 멕시코 등



##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구분		개 인	법 인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대상세목	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여시점	2000.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부여기준	신고 · 자진납부세액 10만원 당 1점 (고지납부 0.3점)	신고 · 자진납부세액 10만원 당 1점 (고지분 제외)
세금포인트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개인·법인) - 납세유예 신청시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1p당 1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채납자 재산 매각유예(개인 · 법인) - 1천만원 이하 소액채납자 압류재산 매각유예(1p당 1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 · 법인)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 - 사무 · 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개인) - 기획 · 특별전시 관람료 10% 할인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세종수목원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개인) - 국립수목원 입장료 20%(1천원) 할인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법인) -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무상 제공</li> </ul>		
세금포인트 조회	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②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 자기계발의 기초

자기계발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표와 필요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기계발을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자기계발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알아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동기를 유지하고 궤도에 오르기 쉽습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목표를 알고 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와 각 단계를 완료하기 위한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행하십시오.

계획이 있으면 실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때때로 어려울 수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진행 상황을 추적하십시오.

진행 상황을 추적하면 동기를 유지하고 목표 달성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자기계발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하루 사이에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내심을 갖고 끈기있게 노력하면 결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최신 판례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본점에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지점에서 관련 후속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본점에서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가능함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로서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03분의 3)가 가능한 것임

사전법규부가-1020, 2022.12.08

### ■ 질 의

- 신청법인(또는 “본점”)은 중고자동차 판매업 및 자동차해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본점 및 지점은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해체업 등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며
- 지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되어 있음(본점은 등록되지 않음)
- 본점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사업자와 폐차차량 관련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을 하였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 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위치한 지점에서 수행하였으며
- 폐차차량은 본점의 의사결정 하에 지점 사업장소재지에서 제3자에게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 후 본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한편, 신청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여 적용받고 있음

### 질의

- 자동차해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 · 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 본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03분의 3) 가능 여부

### ■ 회 신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 · 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로서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본점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A법인)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B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제5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1000, 2022.05.20

### ■ 질 의

- (질의1)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방법
- (질의2)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 방법

###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A법인)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B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 없음**

서면질세-6703, 2022.11.28

### ■ 질 의

- 서면질의 신청인이 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질의

-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재산-4847, 2022.12.13

### ■ 질 의

- 장기임대주택(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2020.8.18. 전에 멸실된 후,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재건축 완료로 취득한 주택(B'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임대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 소득령 155<23>에 따라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20>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국세청, 2기 중소기업 가업승계 컨설팅... 7월 한 달 동안 신청접수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기 중소기업 가업승계 컨설팅 신청을 7월 한 달 동안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가업승계 컨설팅은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자의적으로 자녀 상속증여 플랜을 짰다가 오류를 저지르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컨설팅 외에도, 안내책자 개편, 리플릿 및 동영상(명문 장수기업의 필수코스 시리즈)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물라서 못 쓰는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측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최대한 제공하는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 여부는 오는 8월 31일 안내할 예정이다.

### 국세청, 대구 중리동 공장화재 피해 납세자 납기 연장

지난 15일 대구 서구 중리동 공장화재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다.

당면한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세금 때문에 불가피한 압류매각 조치도 유예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일 경우 '일단 멈춤, 다각도로 세정 지원키로 한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16일 "이번 화재로 건물 기계장치재해 등이 불에 타거나 훼손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예 착수를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피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중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처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호 대구국세청 징세과장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세청,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5년간 276건 자체시정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청구건 588건 가운데 182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담당자의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 신청 3584건 중 조사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645건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했다.

또한,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도 2033건 중 1036건을 수용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간위원 주도의 심의기구로 국세청 본청과 전국 지방청(7개) 및 세무서(133개)에 각각 하나씩 설치돼 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개선 사안의 경우 권고형식을 통해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도 이행 중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일반 국세행정 10개 전 분야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장부 등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시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23년 하반기 발전연료 ·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 기획재정부 · 2023. 6

##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

정부는 '23.6.30.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Delta 15\%$ ) 조치를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23.7.1.부터 12.31.까지 6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율 인하 현황 >

(단위: 원/kg)

구 분		당초		현행 (탄력)	구 분		당초		현행 (탄력)
		기본	탄력				기본	탄력	
액화천 연가스 (LNG)	발전용 LNG (일반)	12	12	10.2	유 연 탄	고열량탄 (5,500kcal~)	46	49	41.6
	발전용 LNG (열병합)	12	8.4	8.4		중열량탄 (5,000~5,500kcal)		46	39.1
	비(非)발전용 LNG	60	42	42		저열량탄 (~5,000kcal)		43	36.5

\* 붉은 네모가 이번 연장대상 탄력세율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LNG(\$/mmbtu), 유연탄(\$/톤) 가격 추이:

LNG: ('19) 5.5 ('20) 4.4 ('21) 18.8 ('22) 34 ('23.1) 20.9 (2) 15.7 (3) 13.2 (4) 12.1 (5.26) 10

유연탄: ('19) 77.8 ('20) 60.4 ('21) 138 ('22) 362.8 ('23.1) 357.8 (2) 208.6 (3) 177.1 (4) 189.7 (5.26) 168.1





##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

한편, '20년 7월부터 그간 5회 연장하여 '23.6.30.까지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원) 제도는 6.30일 자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sup>1)</sup>」가 새롭게 시행되어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게 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sup>2)</sup>,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sup>3)</sup> 등 특례 제도로 올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1) 국산-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해소를 위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 반출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유통 관련 판관비·이윤: 18%) 만큼 차감해 계산하는 제도('23.7.1. 시행)

※ (효과 예시) 그랜저(출고가 4,200만원 가정)의 경우 탄력세율 환원 시(+90만원), 과세표준 경감효과(△54만원)로 구매가격은 +36만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2) 친환경차에 대해 '24.12월까지 개별소비세 인하(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한도)
- 3) 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가 차량 구입시 친환경차 감면 등과 중복하여 300만원 추가 감면 가능

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및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차·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후속절차 계획 ]

정부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6.27. 예정) 등을 거쳐 '23.7.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이 시정됩니다

— 국세청 : 2023. 6

-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갑니다.
-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7.1.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됩니다.

## |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금액 (과세표준) 조정 구조 |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단위 : 만원)

구 분	현 행	18% 경감	차 이
① 공장 반출가격	4,200	4,200	
경감금액	-	756	4,200×18%
② 과 세 표 준	4,200	3,444	△ 756
③ 세 금	720	666	△ 54
개별소비세	210	172	△ 38
교 육 세	63	52	△ 11
부가가치세	447	442	△ 5
④ 소비자 가격 (①+③)	4,920	4,866	△ 54

-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23.7.1.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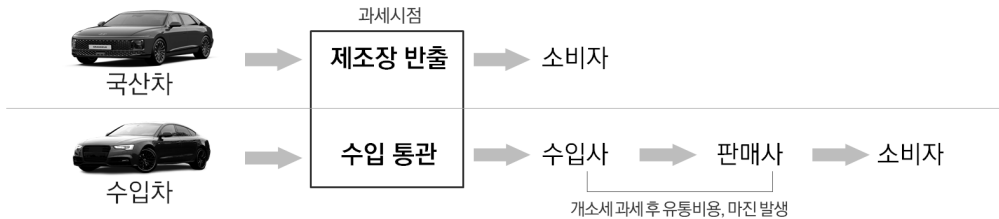


## I 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문제점

-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 과세되고 있습니다.

\* '23.6.30.까지는 3.5% 탄력세를 적용

### | 자동차 유통 구조 |



- 이에 따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차이 |



- 같은 가격이라해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국산차	판매가격 6,000만원 가정	수입차
5,633 만원	과세표준 (①)	4,080 만원
282 만원	개별소비세 (②=①×5%)	204 만원
85 만원	교육세 (③=②×30%)	61 만원
367 만원	세금 차이	265 만원

\*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20.12.3.)

## II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개선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이하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도가 시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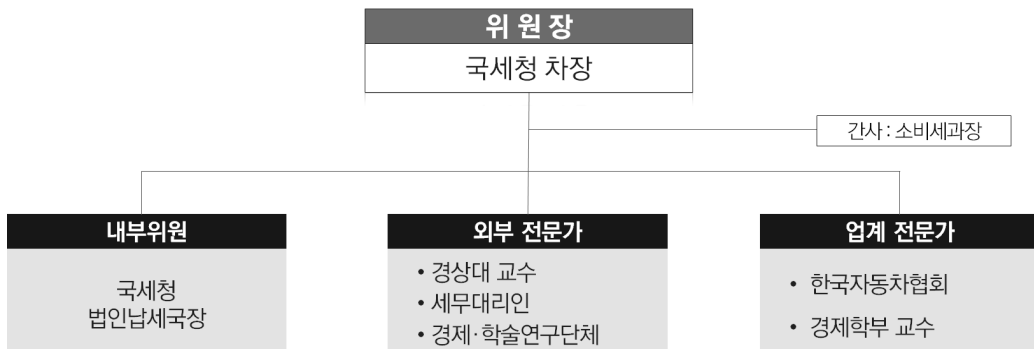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 (개소세법 시행령§8①9)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 제조장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반출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 산정
  - 국세청장이 유통·판매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 이윤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판매비율 결정·고시(3년간 적용)
- 국세청은 지난 4.27.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 개최하여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7.1. 이후 출고분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어,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됩니다.

### | 기준판매비율 적용 시 과세표준 개선 |

현행	23.7.1.부터
반출가격 (판매가격)	반출가격-(반출가격×18%)

-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준판매비율의 적용 방법과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고 3년 임기로 운영됩니다.





## III

##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 (소비자 가격 인하) 올해 7.1. 부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 각 사별 베스트셀러 기준 가격인하 효과 |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출처 : 각 사 제공

현대 그랜저 (4,200만원*)	기아 쏘렌토 (4,000만원)	르노 XM3 (2,300만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2,600만원)	KG 토레스 (3,200만원)
△54만원	△52만원	△30만원	△33만원	△41만원

\* 제조장 반출가격

## |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금액 (과세표준) 조정 구조 |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단위 : 만원)

구 분	현 행	18% 경감	차 이
① 공장 반출가격	4,200	4,200	4,200x18%
경감금액	-	756	
② 과 세 표 준	4,200	3,444	△ 756
③ 세 금	720	666	△ 54
개별소비세	210	172	△ 38
교 육 세	63	52	△ 11
부가가치세	447	442	△ 5
④ 소비자 가격 (①+③)	4,920	4,866	△ 54

- (과세형평성 제고 등)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IV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및 자동차 업계 반응

- 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국민부담 완화, 과세형평성 제고,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습니다.
- 심의회 위원들은 기준판매비율 도입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가운데, 경제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판매비율 적용 주기(3년)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는 그동안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의 개선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수입물품과의 역차별 문제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 V 향후 계획

-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23.7.1.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됩니다.

#### 붙임 - 자동차, 가구, 모피 과세대상 및 세율

구 분	자동차	가구	모피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 8명 이하 승용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전기차(경차 제외)</li> <li>• 이륜자동차(125cc초과)</li> <li>• 캠핑용자동차</li> </ul>	고급가구 (1조당 800만원, 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모피 (500만원 초과분)
과세표준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		
세 율	5% (‘23.6.30.까지 3.5%)	기준가격 초과분의 20%	기준가격 초과분의 20%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 붙임 2 - 개별소비세 세수현황

(억원)

구 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자동차	국내분	9,308	8,427	7,954	9,768	10,188
	수입분	4,748	3,023	3,992	4,846	4,952
	합 계	14,056	11,450	11,946	14,614	15,140
가 구	국내분	22	4	3	1	0.3
	수입분	62	41	56	34	34
	합 계	84	45	59	35	34.3
모 피	국내분	1	1	2	10	0.5
	수입분	16	10	14	15	12
	합 계	17	11	16	25	12.5

## 붙임 3 -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항9호(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제8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나.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8조제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품목(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말한다)을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판매비율은 그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

#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Tip

- 국세청 · 2023. 6

## □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

-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
  -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이 연간 600만원 이상
  - 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기준시가 9억원 과 지분율 30%는 과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지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①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 ②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 사례

주택	김국세(본인)	박타인(제3자)	최삼자(제3자)
서울 ○○구 ○○동	20%	80%	-
부산 ○○구 ○○동	49%	-	51%
대구 ○○구 ○○동	49%	51%	-
인천 ○○구 ○○동	20%	40%	40%

⇒ 김국세는 4채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모두 소수지분으로 과세대상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주택 수 0채)

\* 박타인 3채, 최삼자 2채(인천 주택은 박타인과 최삼자의 주택 수에 모두 포함)

※ 단, 주택별로 김국세에게 귀속되는 임대수입금액이 6백만원 이상인 주택이 있거나 부산과 대구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주택은 김국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





##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2022년 세액비교)

##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사례

- ※ 아래 사례는 주택임대소득의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여부에 따라 세액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대상 가능 여부, 건강보험료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도 포함됩니다.)

### -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 [조건]

- 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 ②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없음 &
- ③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 없음

⇒ 종합과세 시 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701101~701104, 701301)이 종합과세가 분리과세(세율 14%)보다 유리하거나 같음

#### [계산사례]

- ①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0원
- ②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 : 하지 않음
- ③ 주택임대 업종 : 일반주택임대(701102)
- ④ 연간 임대수입금액 : 2천만원
- ⑤ 주택임대 종합과세시 신고방법: 단순경비율(42.6%)
- ⑥ 종합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
- ⑦ 세액공제감면 :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적용  
⇒ 종합과세 결정세액 528,800원 < 분리과세 결정세액 1,120,000원

구 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종합과세대상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0,000	0	20,000,000
주택임대 필요경비	20,000,000 × 42.6% = 8,520,000		20,000,000 × 50% = 10,000,000
주택임대 소득금액	20,000,000 - 8,520,000 = 11,480,000		10,000,000 - 2,000,000 = 8,000,000
종합소득 금액	11,480,000 + 0 = 11,480,000	0	
과세표준	11,480,000 - 1,500,000 = 9,980,000	0	
산출세액	9,980,000 × 6% = 598,800	0	8,000,000 × 14% = 1,120,000
감면공제세액	70,000	0	0
결정세액	598,800 - 70,000 = 528,800	0	1,120,000
결정세액 합계	528,800	1,120,000	

#### －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Ⅰ)

##### [조건]

- 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1천만원 이하 &
  - ②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
  - ③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60%)와 공제금액(4백만원) 우대가 적용
- ⇒ 분리과세 소득금액과 세액이 없으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701101~701104, 701301)이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하거나 같음

##### [계산사례]

- ①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8백만원
- ②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 : 2022년 계속해서 모두 등록



-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 5% 이하  
 ④ 주택임대 업종 : 일반주택임대(701102)  
 ⑤ 연간 수입금액 : 1천만원  
 ⑥ 주택임대 종합과세시 신고방법 : 단순경비율(42.6%)  
 ⑦ 종합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  
 ⑧ 세액공제감면 :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적용  
 ⇒ 종합과세 결정세액 686,000원 > 분리과세 결정세액 320,000원

구 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종합과세대상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10,000,000	0	10,000,000
수입금액			
주택임대 필요경비	10,000,000 × 42.60% = 4,260,000		10,000,000 × 60% = 6,000,000
주택임대 소득금액	10,000,000 - 4,260,000 = 5,740,000		10,000,000 - ,000,000 - ,000,000 = 0
종합소득 금액	5,740,000 + 8,000,000 = 13,740,000	0 + 8,000,000 = 8,000,000	
과세표준	13,740,000 - 1,500,000 = 12,240,000	8,000,000 - 1,500,000 = 6,500,000	
산출세액	12,240,000 × 15% = 756,000	6,500,000 × 6% = 390,000	0 × 14% = 0
감면공제세액	70,000	70,000	0
결정세액	756,000 - 70,000 = 686,000	390,000 - 70,000 = 320,000	0
결정세액 합계	686,000	320,000	

－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Ⅱ)

**[조건]**

- 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4백만원 이하 &
- ②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소득금액과 세액이 없으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701101~701104, 701301)이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하거나 같음

**[계산사례]**

- ① 주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8백만원
- ②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 : 모두 등록하지 않음
- ③ 주택임대 업종 : 일반주택임대(701102)
- ④ 연간 수입금액 : 4백만원
- ⑤ 주택임대 종합과세시 신고방법 : 단순경비율(42.6%)
- ⑥ 종합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
- ⑦ 세액공제감면 :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적용  
⇒ 종합과세 결정세액 457,760원 > 분리과세 결정세액 320,000원

구 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종합과세대상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수입금액	4,000,000	0	4,000,000
주택임대 필요경비	4,000,000 × 42.60% = 1,704,000		4,000,000 × 50% = 2,000,000
주택임대 소득금액	4,000,000 - 1,704,000 = 2,296,000		4,000,000 - 2,000,000 - 2,000,000 = 0
종합소득 금액	2,296,000 + 8,000,000 = 10,296,000	0 + 8,000,000 = 8,000,000	
과세표준	10,296,000 - 1,500,000 = 8,796,000	8,000,000 - 1,500,000 = 6,500,000	
산출세액	8,796,000 × 6% = 527,760	6,500,000 × 6% = 390,000	0 × 14% = 0
감면공제세액	70,000	70,000	0



결정세액	527,760	390,000	0
	- 70,000	- 70,000	
	= 457,760	= 320,000	
결정세액 합계	457,760	320,000	

#### □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을 확인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sup>1)</sup>과 공제금액<sup>2)</sup>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sup>3)</sup>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필요경비율 : 미등록 50%→등록 60%

2) 공제금액 : 미등록 2백만원→등록 4백만원

3) 감면율 : 감면대상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

- 다만, 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 세액 비교

구 분	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②(① 이외의 경우)
	장기(8·10년 이상)	단기(4년 이상)	
총수입금액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필요경비 (-)	1,200만원 (60%)	1,200만원 (60%)	1,000만원 (50%)
공제금액 (-)	400만원	400만원	200만원
과세표준 (=)	400만원	400만원	800만원
세율 (×)	14%	14%	14%
산출세액 (=)	56만원 (75%)	56만원 (30%)	112만원
세액감면 (-)	42만원	16.8만원	0원
결정세액 (=)	14만원	39.2만원	112만원

#### 【가정】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원 이하
- ①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한 경우로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혜택요건과 감면요건 충족
  - ⇒ 사업자등록 등 우대요건을 충족한 경우 결정세액은 14만원(장기), 39.2만원(단기)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112만원 보다 유리(소득세만 비교한 결과임)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금융감독원 2023. 6

## 1. 추진 배경

-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23.1월)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에 대한 보험계리법인 등의 외부검증\*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 \*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내부의 선임계리사가 책임준비금을 검증하는 절차와 별도로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법인(보험개발원 포함)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21.6월 시행)
- 이에 금융감독원은 '23.2월부터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하여 보험계리법인 등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강화, 제도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T/F 구성 개요>



## 2. 간담회 개최

- (개요) 그간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에서 마련된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주요 개선방안>

- ① (검증매뉴얼 전면개편) 기존 회계기준(IFRS4)으로 작성된 외부검증 검증매뉴얼이 있지만, IFRS17 책임준비금 검증에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였습니다.
  - 계리법인이 보다 충실히 IFRS17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IFRS17 기준



으로 검증매뉴얼\*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 가정 적정성, 책임준비금 적정성, 이익잉여금내 준비금 적정성 검증 등 약 140여 페이지 규모

- ② (표준검증시간 도입)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이나, 회계감사 등에 비해 인력투입 시간이 적고 보수가 낮아\* 외부검증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 IFRS17 사전 회계감사 평균비용 약 6억원(약 5천시간) > IFRS4 계리법인 외부검증 평균비용 약 5천만원(약 1.9천시간)

- 충실한 검증을 위한 최소시간\*인 표준검증시간을 마련하여 과도한 검증비용 할인을 통한 형식적인 책임준비금 검증을 방지하고, 외부검증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최초검증시 회사규모에 따라 2,400시간(자산 1조원 ↓ 회사) ~ 4,600시간(자산 20조원 ↑ 회사)

- ③ (검증품질 핵심지표 마련) 계리법인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회사 정보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회사가 우수한 계리법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매출액, 인력의 질적·양적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의 지표로 구성된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하고, 외부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계리법인별로 매년 핵심지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한국보험계리사회가 계리법인별 핵심지표를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 ④ (검증기관간 협의체 구성) '21년 외부검증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에 대한 검증주체가 회계법인 및 계리법인으로 확대되었으나, 회계·계리법인간 협의체가 없어, 이슈사항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 책임준비금 관련 이슈에 대해 회계-계리법인 간 상호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계리법인·회계법인·보험회사간 검증협의체 운영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 참고

#### <맺음말>

- 차수환 부원장보는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 금번 마련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이외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의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IFRS17 시행 이후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3. 향후 계획

- 한국보험계리사회는 검증매뉴얼, 표준검증시간,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반영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간함과 아울러 한국보험계리사회 홈페이지

(<http://www.actuary.or.kr>)에도 게시할 예정이며,

- 금감원은 충실한 외부검증이 수행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계리법인의 사후 검증책임 부과, 감사위원회 검증기관 선정 및 사후평가 역할 부여 등

## 붙임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 (자율규제)

### ①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품질제고방안

#### ① 검증매뉴얼 전면 개정

- (현황) IFRS17 책임준비금은 복잡하고 검증이 어려우나, 검증매뉴얼이 부재하여 외부검증 기관의 충실한 검증이 곤란하고, 수행여부 확인도 어려움
- (개선방안) 시가평가 책임준비금 검증 강화를 위해 새로운 회계기준(IFRS17)에 따른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무매뉴얼」 전면 재개정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무매뉴얼 주요내용>

항 목	주요 내용
I. 가정 적정성 검증	위험률·해약률·사업비 등 가정산출 절차(통계→산출기준→산출 방법→변경사항→산출결과→문서화)별 검증항목, 검증방안
II.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대상계약 및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기준, 검증방안, 체크리스트를 제공
III.. 이익잉여금 내 준비금 검증	해약환급금준비금, 보충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검증항목, 검증방안, 체크리스트를 제공
IV. 참고	단계별 책임준비금 검증 목록 및 프로세스 외부검증 실시내용 양식 제시

#### ② 표준검증시간 도입

- (현황) IFRS17 책임준비금 검증업무는 난이도가 높으나, 낮은 검증보수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증시간 투입이 어려워 검증품질 훼손 가능
- (개선방안) 충실한 책임준비금 검증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적정 검증시간을 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검증시간 마련

#### <표준검증시간 기준(안) (자산 20조원 이상 회사 기준)>

구분	검증 항목	표준검증시간	
		최초	계속
최적가정	계리적, 경제적 가정 적정성 검증	1,200	1,000
최초검증	결산업무 Flow 및 System 검토, 계리 방법론, 감독기준 부	600	-





	합여부 검토		
결산검증	적립대상계약,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1,200	1,000
	모델 및 현금흐름 적정성 검증	1,200	1,000
결산검증 (기타)	해약환급금준비금, 보증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계약자배당 적정성 검증	400	400
표준검증시간 합계		4,600	3,400

### ③ 검증품질 핵심지표마련

- (현황) 외부검증 품질 확보가 중요하나 사후감리 절차도 부재하며, 검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없어 검증품질 수준 비교 어려움
- (개선방안) 매출액, 인력 등 계량지표 및 업무수행 내역, 인적자원 관리 등 비계량지표로 구분하여 품질관리 핵심지표 마련하고 보험계리사회가 이를 취합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

#### <품질관리 핵심지표(안)>

구분	핵심 지표
1. 총괄지표	업무실적 총괄, 검증업무 수행 내역, 검증업무 매출액 구분
2. 인력지표	전체인력의 수(계리사, 非계리사), 전체인력의 교육훈련(평균시간, 미이수)
3. 수행지표	검증업무 수행시 기준·윤리기준 준수, 회사별 평균 검증투입인력·시간, 검증결과에 대한 재검증 요청건수, 검증업무 수행과정 문서화, 검증업무 책임분담
4. 관리지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핵심지표 제출, 인적자원·업무시간 관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검증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관리

### ②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효율성 제고

#### ① 유관 검증기관 간 협조 강화방안 마련

- (현황) 일반회계(GAAP), 감독회계(SAP), 건전회계(PAP) 재무상태표상 책임준비금 검증\*이 연관되어 있으나 검증주체가 상이할 경우 이슈 논의기구 부재

\* 검증주체 : 일반회계(회계법인), 감독회계(계리법인 등), 건전회계(회계 및 계리법인)

- (개선방안) 각 검증기관 및 보험사 검증 책임자간 검증협의체 운영 모범사례를 배포하여 책임준비금 검증이슈에 대한 상호협의를 유도

#### ② 검증시기 분산

- (현황) 일반적으로 외부검증 수행시기는 매년 1분기에 집중되어 외부검증기관 및 인력 제한 등으로 충분한 검증시간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 상존
- (개선방안) 외부검증기관으로 하여금 검증계획·절차를 수립토록 하고 사전검증 가능 업무 구분 등 검증 프로세스 및 시기 등을 예시\*로 제시

\* 예시) 연중검증이 가능한 계리적 최적가정 등 사전 검증, 결산검증시 변경사항만 검증 등

#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시행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 2023. 6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 1)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2)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가방법 규정 신설, 3)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국무회의 상정의결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며,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되며, 노동조합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금년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하면 된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이 노조 재정 운영에 더욱 관심을 가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건강한 노동운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동조합은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붙임 1 -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①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

- (필요성) 현재 회계감사원\*의 자격·선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회계 관련 지식·경험이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임 가능→ 객관성·신뢰성 한계
  - \* 「노동조합법」 §25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중략) 회계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개선방향) 회계감사원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며,
  - 1)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2) 조합원(대의원) 1/3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②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공표 시기·방법 구체화

- (필요성) 노조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하나 시기·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조합원 알권리 보호 필요
  - \* 「노동조합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개선방향)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회계사·회계법인 감사는 3개월)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 ③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 (필요성) 조합원 정보접근성 강화, 미가입 근로자 노조 선택권·단결권 보장
- (개선방향) '매년 4월 30일까지'(부득이한 경우 9월 30일) 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 \*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표하는 경우 노조법 제26조에 따른 결산결과 공표 의무 이행으로 간주

## 붙임 2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① 필요성

- 노동조합비는 노조의 투명성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 여타 기부금\*\*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 근로자에게 기부금 15% 세액공제(1천만원 초과분 30%)
  - \*\* 여타 기부금(예: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은 결산결과 공시 등 투명성 의무 이행을 요건으로 혜택 부여 중
-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 확보 필요

② 개선방향

- (공시대상) 조합원 수 1천명 이상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경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서류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 － 소규모 노조의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고,
  - －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도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시절차) 노동조합이 공시시스템에 매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
  - \*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9월 30일까지
  - － 연말까지 노동부장관이 공시 여부를 확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및 노동조합, 국세청장에게 통보
- (시행시기) `23년 결산서류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한 `24년 회비 납부분부터 적용

# 퇴직연금, 운용은 보다 유연해지고, 공정경쟁 안착을 위한 시장 규율은 강화된다

— 금융위원회 2023. 6

금융위원회는 오늘(6월2일)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2일)한다. 동 개정안은 ❶퇴직연금 300조원 시대\*에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운용규제 개선과 ❷금융안정 제고 및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 강화를 큰 축으로 하고 있다.

\*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18] 190.0 ['19] 221.2 ['20] 255.5 ['21] 295.6 ['22E] 335.9

## ❶ 퇴직연금 제도 별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한다.

먼저, 확정기여형(이하 "DC형") 및 개인형(이하 "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한다.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이하 "DB형")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 등의 편입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IRP형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해상충 규제를 완화하거나 두지 않고 있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가 ①DC형은 20%\*, ②IRP형은 30%로 상향됨에 따라, DC형·IRP형 퇴직연금의 보다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DC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가능성 ☞ 규제 비율을 IRP보다는 낮게 설정

\*\* [예] A자동차 근로자 X씨가 IRP 계좌를 통해 A중공업(A자동차 계열사) 발행 회사채를 퇴직연금 적립금의 30%까지 편입 가능

다음은 DB형에서 동일한 발행 특수채·지방채를 투자할 때 그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DB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수준(부채)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부채)와 퇴직연금 적립금(자산)의 현금흐름을 일치시키는 자산-부채 매칭(ALM: Asset-Liability Matching)이 중요하다. 미국·영국 등 주요 연금 선진국에서는 DB형 퇴직연금에서 ALM에 기반한 운용이 일반화되어 있어, 채권이 ALM 운용전략 구현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우량한 장기 자산인 특수채·지방채 편입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DB형 퇴직연금에서 보다 원활하게 ALM 운

용전락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 합리화 사항도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보장상품"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중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에, ①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을 추가하고, ②이미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분류되어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율 체계에 맞추어,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IRP형에서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1인당 적립금 규모도 '22년 약 5,000만원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중은 '22년 기준 약 7.1%\*\*로, 여전히 다수 은퇴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 1인당 적립금(만원): ['15] 2,001.9 ['18] 3,112.2 ['21] 4,323.5 ['22E] 4,787.8

\*\* 연금 형태 수급 비중(%): ['18] 2.1 ['19] 2.7 ['20] 3.3 ['21] 4.3 ['22E] 7.1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주로 펀드)으로 운용하되,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변액연금과 달리, 사업비 등을 수취하지 않으며, 보증수수료는 부과된다.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면서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은퇴자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도해지 시 이미 납입한 보증수수료를 차감한 실적이 반환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동 상품은 보험개발원이 보증수수료 요율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고, 상품 개발 및 상품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이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②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건전 영업 관행을 혁파한다.


먼저, 지금까지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공시의무를 비퇴직연금사업자(이하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하여, 소위 "커닝공시" 및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자 한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자는 물론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도 익월 적용할 금리를 금월 공시(늦어도 매월 1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 공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감독규정에 따라 금리가 공시되지 않은 원리금보장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음으로,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도 금지한다. 지금까지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수료를 보조금처럼 활용해 고금리 예금 등을 만들어\*, 이를 일부 대기업 DB형 퇴직연금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해 왔다. 이는 가입자 간 형평에 반하고, 근로자 이익과도 무관\*\*한 바, 수수료 제공·수취 금지를 통해 해당 영업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

\* [예] A은행은 6.3%의 예금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금리 5%를 제공할테니, 퇴직연금사업자 B가 수



수수료 150bp를 지불해 "예금금리를 보조"할 것을 제안(수수료 차액 20bp는 A은행이 수취)

\*\* 수수료를 활용한 고금리 상품은 대부분 DB형에서 제공 중인데, DB형은 퇴직급여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  고금리 상품 가입에 따른 수익률 개선 효과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귀속

마지막으로, 파생결합사채 관련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일부 증권사들은 실질은 원리금보장상품이지만, 감독규정 상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를 제공해 왔다. 현행 감독규정은 원리금보장상품에 적용되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나, 변칙 파생결합사채는 이러한 규제들을 우회하여 왔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① 사모 파생결합사채는 판매가 금지되며, ②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① 원금+수익 보장, ②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無, ③ ELS와 계정분리, ④ 공모로 발행

\*\*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해, 공시의무, 수수료 금지, 자사 상품 판매 금지 등 규제 적용

\*\*\* [예] 만기 도래 시까지 CD금리가 「0~20%」 5% 금리 제공, 「20%~」 원금만 제공」하는 구조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는 실질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

오늘 입법예고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7월2일까지 의견청취를 거칠 예정이며, 입법예고 종료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참고 -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규제 개선 주요 내용

### □ 운용규제 합리화

① (DC·IRP)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퇴직연금 제도 별로 상이하므로, 제도 별로 이해상충 규제 합리적 차등화\*

\* 계열회사 및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 한도를 ① [DB] 0% 유지, ② [DC] 10→20%로 상향, ③ [IRP] 10→30%로 상향

② (DB) DB형 퇴직연금의 운용전략(ALM)을 감안해, DB형에 한해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 편입 한도 상향(30→50%)

③ (DB·DC·IRP)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범위 확대\*(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

\* ①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 ② 국채·통안채 담보부 익일물 RP매수, ③ 자본시장법 상 MMF, ④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④ (IRP) 연금 형태 인출에 특화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은퇴 후 연금을 지급 받는 고객의 IRP 계좌로만 가입 가능)

### □ 불건전 영업 관행 규율 강화

①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공시의무 적용(동일기능-동일규제)

②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 명확화\*를 통해,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 개선 유도

퇴직연금, 운용은 보다 유연해지고, 공정경쟁 안착을 위한  
시장 규율은 강화된다

\* 현재는 수수료 수취는 금지되지만, 자발적인 제공은 가능하다는 업계 관행 존재

③ 퇴직연금 시장 내 사모 파생결합사채 판매 금지

④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에 원리금보장상품 규제 적용  
(동일기능-동일규제)

\* [예] 만기 도래 시까지 CD금리가 「0~20%」 5% 금리 제공, 「20%~」 원금만 제공」하는 구조  
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는 실질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 2023. 6

PEF설립과 같이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의 신고를 면제하는 등 M&A 신고 및 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사건 심의 과정에서 기업이 의견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M&A 심사의 신속화 및 효과성 제고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 심의절차 개선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으며, 오늘 통과된 법률안은 이러한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①PEF 설립, ②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③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④계열회사 간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위 유형들은 작년 신고되었던 기업결합 건수의 약 42%에 달하는 것으로서, 개정 법률안 내용대로 법이 개정되는 경우 실제 신고 건수도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경쟁제한적 M&A관련, 기업이 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시정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공정위는 M&A가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 제거를 위해 기업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시정조치를 공정위가 제한된 정보(신고서류 및 기업의 비공식적 자진시정 방안 등)에 기초하여 직접 설계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①공정위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정보 및 시정방안 이행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많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②그 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는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할 때 기업이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는 대부분(미국, EU, 영국 등)의 경

쟁당국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한편, 개정 법률안은 그간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각종 자료들이 종이문서로 오고감에 따라 발생 하던 사업자의 불편함, 공정위의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문서의 전자적 제출·송달제도를 도입 하였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사건의 당사자 등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가칭)을 통 해 공정위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정위는 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의 심의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 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당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사업자가 전자적 송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교부송달, 등기송달)으로 심 의문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자가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에 동의하였음에도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의결서·재결서는 14일, 기타 문서는 7일)이 지 난 후 그 등재된 문서는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대로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M&A에 대한 신고부 담이 완화되고,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M&A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정보가 활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정조치의 효과성 및 이 행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 M&A 심사제도와 해외 제도 간의 정합 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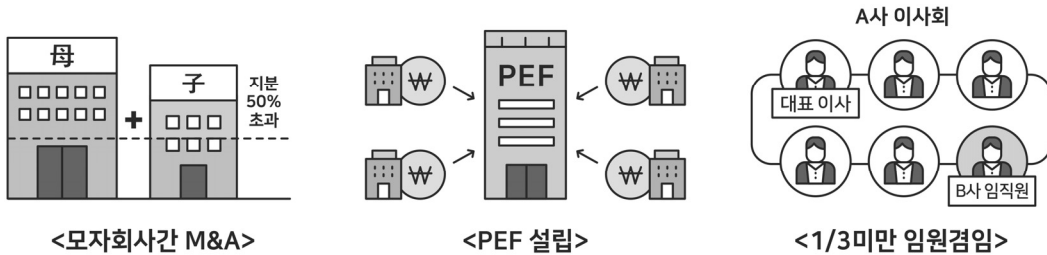
또한, 문서의 전자적 제출·송달제도를 통해 공정위 심의가 진행됨에 따라, 종이문서를 인쇄하여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들의 불편함과 비용부담이 경감되고, 심의 과정 전반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위와 같은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며, 개정 법률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 기업결합 신고면제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 개정안은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①PEF 설립, ②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③1/3미만 임원 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 ① (PEF 설립)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서 PEF 설립 단계는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를 면제한다.

\*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유지됨

- ② (모자회사간 M&A)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

- ③ (1/3 미만 임원겸임)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1/3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식 취득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임원겸임의 경우, 주식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단계에서 임원겸임의 경쟁제한성 여부도 함께 심사되므로, 임원겸임을 별도로 신고받을 실익이 없다는 점 또한 고려하였다.

- 한편, 현행 법률은 계열사간 합병이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규모 산정\*에 있어 계열사 규모를 각각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 결할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 티방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결합만 신고대상임

- 이 경우 계열사 규모가 중복 합산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은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는 규모 합산 '없이' 자체규모만으로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고,
- 이에 따르면 ④계열회사 간 합병인 경우로서 피합병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가 면제된다.

## 붙임 2 -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 정 안
<p>●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 ④ (생략)</p> <p>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생략)</p> <p>1. 2. (생략)</p> <p>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규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로 한다.</p> <p>1. 계열회사 간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p> <p>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상대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상대회사</p> <p>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 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 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p> <p>2.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p> <p>●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3. 임원겸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p>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 3. (생략)

<신설>

④ ~ ⑫ (생략)

<신설>

가.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나. 겸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④ ~ ⑫ (현행과 같음)

● 제13조의2 【시정방안의 제출】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신고 대상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상태(이하 이 조에서 “경쟁제한우려상태”라 한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 내에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제출한 자에게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해소하기에 충분할 것

2.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적정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을 것

●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 제98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수정에 드는 기간은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방안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결합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결합에 대하여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시정방안(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되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 제98조【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① 당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lt;신 설&gt;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등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결서 및 재결서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후 그 등재 사실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방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등이 제4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⑥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5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p>송달)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p>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결합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산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업결합 신고대상 제외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및 제10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로 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





”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⑦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